

# 국무조정실, 화순군 공직자들 조사 ‘뒤숭숭’

〈속보〉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화순군 공무원들의 도박 적발(본보 1월20일 6면 보도)에 이어 화순군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인력 6명은 전날부터 화순군청에 상주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의 성격(특별 감찰)과 기간, 대상이 무엇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8일 전남경찰청이 화순 모처에서 지역 건설사 관계자 A씨와 화

순군 공무원 4명이 도박 중이던 현장을 적발했던 게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이뤄졌다는 대목에서 이와 연관된 행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A씨와 함께 도박을 했던 공무원 중 일부는 이미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까지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 13명. 그 중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세상을 떠난 1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수의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됐을 지도 모

## ‘건설업자와 도박’ 적발 후 연장선...비위 관련 등 무게 郡 “결과 주시”...사안·대상 관심 속 수사 확대 가능성도

른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화순군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의명의 한 공직자는 “동료를 떠나 보내는 합동 추모식 당일엔 자기들끼리도 아니고 업자와 도박을 할 수 있냐”며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적발된 시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1호 청렴주의보가 발령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며 “자체 청렴주의보 전 중앙 부처에서도 복무 관련 공문이 계속 내려왔던 터라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한참 넘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A씨와 도박했던 공무원들

이 건설·건축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의 6급 이상 간부급이고, 부서장까지 포함돼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된 인원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인력이 누구를, 어떤 차원에서 조사 중인지 알지 못한다”며 “도박 비위와 관련된 자체 감사 시행 여부와 입장 표명은 국

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화순군 공무원노동조합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와 함께 도박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추가 조사를 마친 국무조정실이 전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적용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재영 기자



성실과 안전활동 다짐 선서 21일 오전 광주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행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경제활동 지원 확대'에서 참여자 대표가 성실과 안전활동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 광주 북구 홀로 살던 60대 숨진 채 발견

광주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가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에서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상태로 추정됐다. 외부 침입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발견에 앞서 정부 지원 양곡을 가져다 주는 택배기사가 A씨의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북구에 신고했다.

A씨의 집을 찾은 북구 관계자들은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 기초수급자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1인가구 실태 조사당시 고독사 저위험군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 檢, ‘도박자금 미변제’ 임창용에 징역 1년6월 구형

도박자금을 벌린 뒤 일부만 변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KIA 타이거즈 선수 임창용(4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 대해 변경한 공소 사실로 “2019

년 12월 하순 필리핀 한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아내 소유 주식을 팔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A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7천만원만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임씨 측은 모두 부인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액이 도박 집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7일 임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불법계엄 한달 반 불구 내란 여전...민주주의 수호”

시민사회·학계·법조계 ‘사회 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

“사회대개혁안 마련”...내달 15일 선언문 낭독 등 추진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기구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을 21일 출범했다.

1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이하 광주선언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선언운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계엄과 파시즘 발호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

는 대한민국을 위해 광주 시민의 지혜와 열망이 담긴 사회대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체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격하는 서북청년단 식의 극단주의 세력, 이를 정당화하는 여당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곳곳에 뿌리내린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란은 결코 끝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적 폭력을 낳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고장 광주에서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안 이전 국민에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연대하는 다짐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13일 분과별 공론장 조성에도 이어 15일 사회대개혁 광주선언문 낭독, 22일 513명이 참가하는 공론의 장 개최, 27일 광주선언 및 성과 공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선언운동은 출범식 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민교협 전남대분회 소속 김희승 총무와 이광원 민변 광주지부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주성학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세력·배후 철저히 수사해야”

오월 공법 3단체-5·18재단 성명

오월 단체와 기관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극우세력의 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들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극우 세력의 난동과 폭력 사태는 법치주

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오월 단체가 5·18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전 목사에 대한 수사

가 오랜 시간 지연되고 흐지부지돼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항쟁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을 이번 사태에 빚낸 자칭 ‘백골단’ 반공청년단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했다”며 “이는 폭력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동일시하는 저급한 선동이자 5·18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사태의 배후와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선동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성학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